

교육·경험·연습 '3E' 통해 시민 자치의식 높여야

〈Education〉 〈Experience〉 〈Exercise〉



〈하〉 지방자치 성공 조건

지방자치제 부활 30년을 맞았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소멸·소의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발단으로 정치권과 지자체 등에서 지방분권 개혁 요구가 잇따르면서, 지방자치 30년에 걸맞은 '지방시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교육자치 정상화 시급=지방자치제의 성공을 위해선 영호남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일당 독점을 막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지역 인물을 검증하고 정책 경쟁을 통한 공천이 아닌 '줄 서기식' 공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유권자 역시 인물·정책을 가려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특히 영호남을 중심으로 인물은 보지 않고 특정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잘못된 지방선거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당 독점 현상과 함께 지방자치의 올바른 길로 가는 길마저 틀어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자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중 2명이 불명예 퇴진했고,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지방 교육계 수장들의 일탈로 지방교육이 차질을 빚고, 유권자의 '혈세'마저 낭비되는

약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지방자치를 연계해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을 갖는 이유다.

◇주민자치 의식 함양 교육도 필요=지방자치는 제도나 권한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의 자치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3E'로, 첫 번째는 교육(Education)이다. '지방자치가 필요하다'와 같은 주제의 간단한 교육부터 주민들이 자체 회의를 하게 하는 등 지방자치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하거나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사하는 등 지방자치제의 경험(Experience)을 쌓아야 한다. 이 같은 교육과 경험을 꾸준히 연습(Exercise)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주민 의식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잇따른 지방분권 개혁 목소리=지방분권 개혁에 대한 요구도 정치권과 지자체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권(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 등)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헌법에는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자체에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자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등의 간단한 내용만 담겨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는 치명적 결함이라며 분권형 개헌을 주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두관 전 의원이 이날 분권형 개헌에 대해 언급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만큼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을 분권화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과제"라며 "입법·사법·행정을 나눈 삼권분립처럼 중앙·지방 간 권한도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 원장은 "1987년 헌법 체계 개선과 현재 여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 과제 중 하나는 지방자치의 정착·개혁"이라며 "지역에서 지방자치가 얼마나 중요인지 인식해야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민주 대선후보 경선 출마 뜻 밝힌 뒤... 김영록 지사 '광폭 행보'

문 전 대통령·조계종 총무원장·이재명 대표 만나 소통 정치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설 뜻을 밝힌 뒤 올 들어 폭 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데 이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과 만남을 갖고 소통의 정치를 통한 갈등과 분열 해소에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의 만남은 제주항공 참사 당시 불교계의 지원에 대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의 감사 인사 형식을 갖췄지만 사실상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본격적 정치 행보라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김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정권 교체에 대한 호남의 역할과 다양성의 힘으로 민주 개혁 세력의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예도 및 피해자 지원활동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리에서 "지난해 연말 사고 발생 직후 직접 찾아 조문하고 분향소 설치와 위로금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줘 유가족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또 "향후 여객기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 종단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바란다"고 요청했다.

진우스님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어 전 국민적으로 지금 트라우마가 많은 상태이고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선명상'을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심리적 안정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또 담양에 들어설 예정인 국제명상센터 건립 상황을 전하고 "5월이면 공사에 착공하게 돼 조계종에서 추진하는 '선명상'의 대중화와 국민의 마음 치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현 시국과 관련, "어느 때보다 진영이 갈라져 있고, 국민도 갈라져 있다"며 "내 것을 다 가지려 하니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마는데, 반 만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타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총무원장께서 올해 화두로 제시한 '소통'과 '화쟁'인데, 화쟁을 향한 소통의 길만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변명을 지켜줄 수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재창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도 만나 제주항공 참사 관련 특별법, 국립의대 정원 배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건의에 이어 시국 상황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금은 이 대표와 함께 현정질서 회복에 나설 때로 힘을 분산할 때가 아니다"면서 "현정질서 회복과 정권 교체를 위해 호남이 핵심적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저 또한 다양성의 힘으로 민주개혁 세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재명 대표 중기 현장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대내외 경제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피해를 받는 중소기업의 애로청취를 위해 경기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아비만엔지니어링을 찾아 간담회 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치 위기 근본적 해결은 권력분산 개혁”

권성동 국회 원내대표 국회 연설

국회의원 권성동(사진) 원내대표는 11일 "대통령·의회 권력분산 개혁을 해야 하고 민생 추가경정 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4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혁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 및 선거구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 대선·총선·지방선



거 일정 통합 등을 제안하면서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지역화폐와 같은 정책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 회복, 취약계층 지원, AI를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또 이날 안에 '반도체 특별법'도 반드시

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의정 대화 재개를 통한 의료 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 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면서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정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며 "(민주당의) 29번의 연세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외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